

규제 풀어 경제 살리고 작지만 강한 정부 만든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금산분리 완화 확실

■ 경제

이 당선자가 그동안 경제대통령을 표방했던 만큼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되는 분야다. 경제 정책의 기초는 지난 20일 당선 후 가진 첫 내외신 기자회견의 “지난 10년간 반(反)시장적, 반기업적 분위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 왔다. 앞으로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차기 정부가 펼칠 경제정책의 핵심은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감세(減稅)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일자리 증가→소비자의 가치분소득 확대→내수경기 회복→기업 이익 증가라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투자와 소비를 양측으로 삼아 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정책은 ‘규제의 최소화’와 ‘세율의 최저화’로 정리된다.

차기 정부는 우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기업에 최고의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각오다. 규제 체계를 현 정부의 ‘원

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꾼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업의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지적을 받아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또는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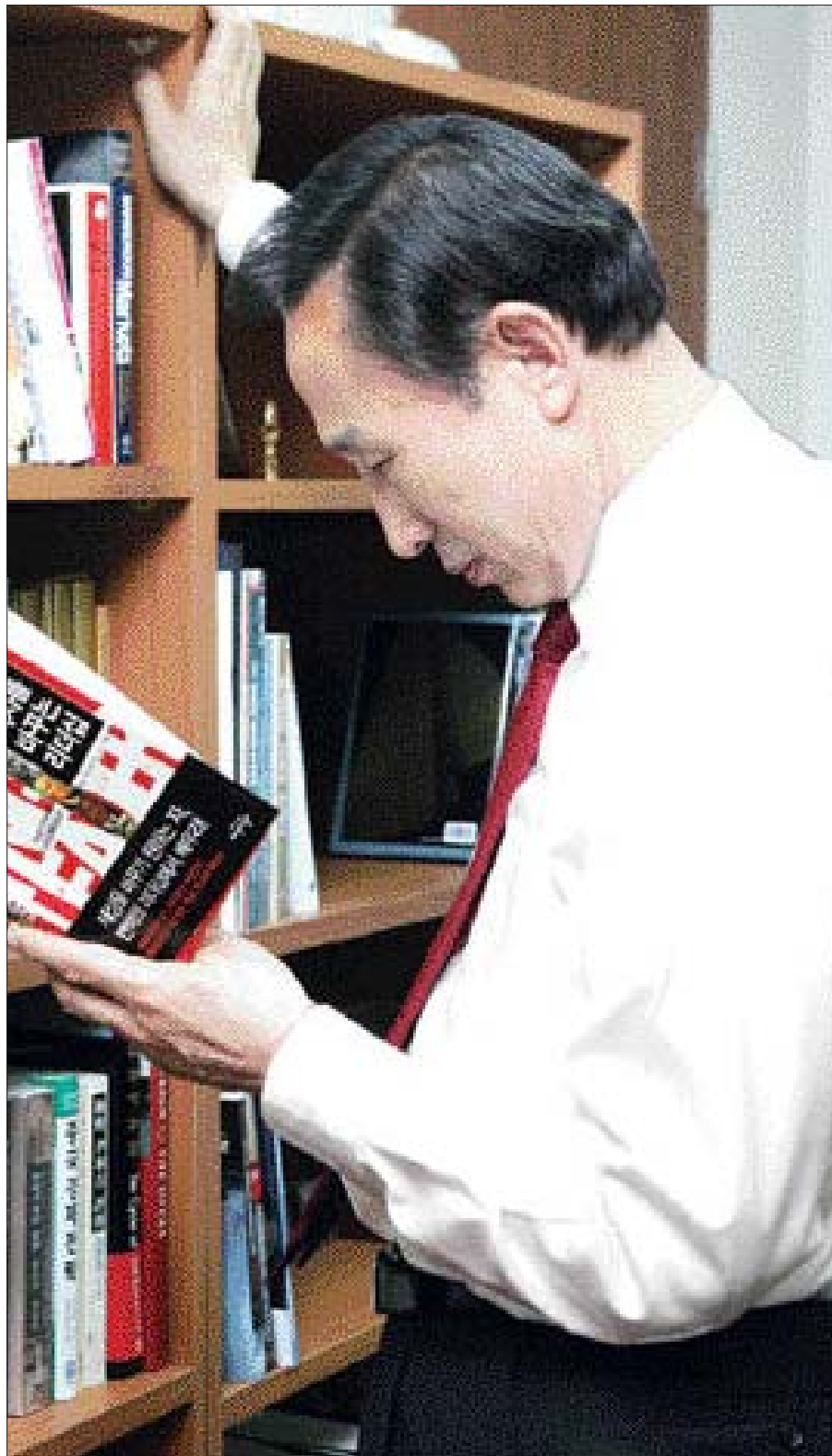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도권 규제와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제한) 원칙도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의 경우 현재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의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연기금, 사모펀드 등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완화책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업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경쟁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20%까지 낮추겠다는 감세 정책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법인세를 현행 13~25%에서 10~20%로 낮추고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정규직 인건비 증가액의 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중소기업만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어떻게 바뀌나

10년만의 정권교체로 국정의 기본 틀이 확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 조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기자회견, 외무인사 점건, 그리고 측근 인사들의 언급 등에서 속도감 있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 5년을 상징하는 근간 정책과 체제 상당수도 방향 수정 내지 폐기될 가능성이 속속 암해진다. ‘선진화’와 ‘실용주의’를 국정철학으로 정한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경제 ▲교육 ▲정부조직 개편 ▲외교 및 대북정책 등으로 나눠 살펴본다.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해 말 서울 중로구 ‘안국포럼’에서 제임스 맥거리스 번스의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을 보며 정국 구상을 하던 모습. /연합뉴스

정통·통일부 등 통폐합...공기업 민영화 가속

■ 정부·공기업

실용 정부를 추구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과 함께 정부 부처 및 공기업 등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처별 기능이 중첩된 측면이 강한 2월 18부 4처 17청의 현 정부 조직 체계를 기능별 재편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때 부처를 기능별로 재편하지 않으면 공직 사회의 저항으로 추후 적절한 타이밍을 찾기 어렵다는 내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최종 통폐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1월 내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경제 관련 부처는 대규모 기능별 통폐합이 예고되고 있다.

재경부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떼내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로 넘기고 재경부는 경제 정책 수립 등에 기능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통폐합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도 큰 틀에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도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외교통일부라는 신설 부처의 이름마저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도 가족복지부 등의 이름으로 합쳐질 전망이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도 농림수산부, 또는 농림해양부로 통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기에 ‘신인 내린 직장’이라는 눈총과 질시를 받았던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의 태풍에 직면할 예정이다. 인수위에서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별도의 관련 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화 선정 기준은 공익성, 효율성, 부채 등 3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즉,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관은 다소 비효율적이고 부채가 많더라도 민영화의 칼날을 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당선자는 공무원 사회도 기수나 근무기간 순으로 승진하는 관행을 과감하게 뜯어 고친다는 계획이어서 공무원 사회에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본고사·고교 등급제 허용...대입은 자율화

■ 교육

차기 정부에서 경제 못지 않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다. 더욱이 교육개혁은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부의 1순위 과제로 꼽히고 있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평등주의에 기반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점수 경쟁을 하지 않고 학교 공부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심어 줬지만 되레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당선자가 내건 교육 공약 슬로건은 ‘공교육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었다. 경쟁과 자율을 강조하는 이 당선자는 교육 분야에서도 입시를 자율화하고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이상 설립하는 등 경쟁을 통한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대입의 근간인 ‘관제’에서 ‘자율’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 대입 자율성을 주는 것이 오히려 과도한 입시 부담과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당선자는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로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 성적 반영 자율 결정,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정부가 지원하고 ▲2단계로 수능 응시 과목을 현재 평균 7개에서 4-6개로 줄여 수험생 부담을 덜어 주며, 대학이 지원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교과별 내신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3단계로 대학이 본고사를 치르지 않아도 학생을 충분히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하면 대입을 완전히 자율화한다는 것이다.

대입을 자율화하면 참여정부 대입 정책의 기조인 3불(不)정책 중 본고사나 고교등급제 금지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이다.

영어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를 매년 3천명씩 양성하고, 원어민교사 확보 및 자격관리 체계를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 이 당선자가 제시한 대안이다. 또 2012년까지 5세 이하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제도를 도입해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저소득층의 보육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약도 제시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미동맹 강화...대북정책 상호주의 전환

■ 외교·안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국의 중심의 실용주의’ 노선을 기반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즉,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및 개방에 나서며 적극적인 경제 외교로 국가의 외교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우선 이 당선자의 대북 정책 방향은 그의 공약에 담겨있다는 지적이다. 대북 투자를 통해 현재 500~1000달러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후 300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비핵·개방·3000구상’은 활기찬 남북간의 경제 교류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한 국제공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해결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당선자의 남북경제교류 정책의 전제 조건은 핵 폐기라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상당한 진통도 예고된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제시된 핵 폐기 프

그램 진행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이 당선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북 지원 및 경제교류 축소 등으로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남북관계가 상당 부분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 당선자가 기존의 합의를 뒤로 미루고 자신의 공약 사항인 비무장지대에 남북 합작 공단을 짓는 ‘나들섬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의 한미 관계가 퇴보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 당선자는 한미동맹의 복원을 위해 집권 초부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이 당선자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핵 물질 이전 및 테러 방지 전략인 PSI와 MD 계획 참여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남북통일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장기 계획, 통일 이후 대중국 전략 등에 대해 미국과 적극적인 의견 조율에 나서면서 느슨해진 한미 동맹의 끈을 조일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